

» 2015 육계업 결산

올해 육계산업은 예견된 불황



김재홍
본회 경영정책국 부장

올해는 닭고기산업전체가 대내외적으로 힘든 한해를 보냈다. 닭고기공급과잉으로 산업전체가 어려움에 봉착되고 외적으로는 수입닭이 밀려와 국내 육계산업은 진퇴양난의 결과를 낳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계열사별 치킨게임이 닭고기생산과잉으로 결국은 산업전체가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이다. 일부는 사육농가는 사육비만 받고 계열사는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니 계열사보다 더 농가현실이 더 좋다는 말을 한다.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 업계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개탄스러울 뿐이다. 말만 상생을 외치면서 뭔가가 진정한 상생인지 신중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올해 중요한 이슈거리를 몇 가지 열거해본다.

1. 닭고기 공급과잉

육계업의 불황은 최근일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2014년 종계 입식은 7,420천수를 나타내 전년동월 1.3% 증가하였고 2015년 10월까지 종계의 입식은 6,222천수로 전년 동기간대비 4.6% 증가하였다. 올해도 2년 연속으로 7,000천수가 넘을 전망이다. 본회는 적정 종계 입식수수를 650만수로 파악한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종계의 과잉입식이 산지시세 하락 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볼 수 있다. 과잉입식의 표면적인 원인은 2014년말 미국의 고병원성 AI으로 미국산 닭고기수입과 원종계수입이 중단되면서 물량 확보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계열업



체에서 최신 설비를 갖춘 도계장을 새로 건립하면서 도계장 운영을 위해 물량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입식량이 늘어났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또한 올해 초 미국산 가금류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닭고기 시장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수입 중단이 된 직후에는 수입량이 줄어들었고 수입 가공업체 및 식자재 업체에서 국내산 닭고기로 사용을 전환하면서 닭고기수요가 늘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브라질산 닭고기가 미국산 닭고기 물량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3월 이후에는 오히려 전년수준을 넘어서는 결과를 낳았다. 육계의 과잉입식과 닭고기 수입까지 늘어나면서 시세 폭락으로 이어졌고 본회 9월 중순의 경우 산지대닭 기준 kg당 1천 원으로 형성되어 생산비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을 형성하였다. 이에 한국계육(육계)협회에서는 병아리렌더링을 자조금사업으로 진행하였다. 9월부터 10월말까지 총 300만개를 렌더링 하였다. 한국계육(육계)협회에서는 지난 여름부터 이어진 육계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병아리렌더링을 추진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었다. 한국계육(육계)협회의 예측대로 조금이라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1월 중순까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 형성되는 등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과연 정부자금이 투입된 자조금이 헛돈만 쓴셈이라는 업계관계자의 평이 나오고 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국계육(육계)협회에서 내세웠던 수급조절의 효과는 아주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대책이 후유증만 나타나고 아무런 결과도 없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우리 육계산업의 불황을 끝도 없을 것이다. 반드시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산업이 살길이라

고 본다. 정부도 계열사의 자율에 맞기지 말고 적극 나서서 육계산업을 살려야 할 것이다.

2. 무허가 축사 양성화대책

무허가 축사대책이 3년간의 협의 끝에 드디어 “무허가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이 발표되었다.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존재하는 등 농가의 불편이 뒤따랐다.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도 실행하면서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산 현실과 괴리된 제도개선 선결 필요하여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 실태 조사, 생산자·전문가 등이 최적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마련하였다. 이런 계기로 농가의 무허가 및 미신고축사에 대해 양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본다. 양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으로써는 첫 번째가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 미 제정 또는 하향 설정(20~50%) 되어있어 제대로 축사를 활용할 수 없었으나 '15. 10월 기준으로 133개 지자체에서 건폐율 60%로 확대하였다. 두번째는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이다. 현행 가설건축물 재질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하지만 이제부터는 가설건축물 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합성강판 1/2이하 사용, 가축분뇨시설 및 가축양육실·운동장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세번째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가축분뇨법 시행규칙 '15.3.24)이다. 현행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 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제도가 개선되어 축사 바닥면부터 30cm² 이상 비닐 등 방수재를 깔고, 10cm² 이상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깔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네 번째는 축사 거리제한 재설정이다.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거리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닭은 20,000수미만은 250m, 20,000~50,000수는 450m, 50,000수 이상은 650m이다. 다섯 번째는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이다. 현행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허가 불가하였지만 개선안으로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간(15.3.25 ~ 18.3.24) 유예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무허가 축사에 가축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처벌을 3년간(15.3.25~18.3.24) 유예한다고 발표하였다. 여섯 번째는 의무적으로 설치한 가축방역시설(소독시설)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5.4.27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기로 하였다. 일곱 번째는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이다. 위반내용에 따라 적정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기로 하였고 경감내용은 현 50% → 40% 이내이다. 여덟 번째는 축사차양, 지붕연결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한다. 축사 차양 3m까지(기 반영),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이내에서 건축면적 제외한다

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신고 및 허가를 통해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하여 적법화 추진할 수 있다. 건축신고(허가)·변경신청 시 '산지전용협의(변경협의)요청서' 및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3. 미국산 가금 및 가금육 수입 재개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되어 국내 육계업계의 대책마련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1월 4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미국과 캐나다를 가금 및 가금육 수입허용국가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이달 17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11월 19일 수입을 허용하였다. 가뜩이나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량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국내 육계업계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미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 이후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보였으나 브라질산이 미국산을 전량 대체하면서 예상과 달리 2014년도와 비슷한 수입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늘어난 브라질산 닭고기와 함께 미국산 가금류 수입 재개로 미국산 닭고기까지 수입된다면 국내 육계시장에 큰 파장이 올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입금지 해제조치로 수입산 가금육의 가격 덩핑으로 시장가격체계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년간 수출하지 못한 냉동 닭고기가 냉동 창고에 상당 수 저장되어 있는데 물량해소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가금육 덩핑으로 국내 육계 시장의 어려움이 더할 것이

다. 해결방안으로는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걸 막기 위해 가금육 원산지 단속과 검역 기준강화를 정부에 요청하고 생산자단체는 국내산 닭고기소비에 심혈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4. "계열사 직영농장 금지 및 정부의 닭고기산업대책 마련 요구" 집회

지난 11월 4일 서울역에서 육계 계열사의 직영농장 설립금지 대책과 정부의 닭고기산업대책마련을 위해 육계 및 종계농가가 모여 집회를 하였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700명의 양계 농민들은 일부 계열사가 안정적인 닭고기 공급이라는 명분하에 직영농장 설립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농가 사육회전수 감소와 계약조건의 악화로 농장경영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양계농가의 생존권 및 사육주권마저 빼앗기고 있고 국내 계열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직영농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상생해야 할 계열회사들이 직영농장 설립을 통해 양계인들의 사육주권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우리의 요구는 계열회사에 앞으로 계획 중인 직영농장 설립을 백지화하고, 운영 중인 직영농장에 대해 운영중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농가가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계열화 사업자가 종축업을 할 수 없도록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회당일 계열사 직영농장 파괴식과 식발식 등 퍼포먼스 이후 결의문 낭독과 남영삼거리까지 행진으로 끝을 맺었다. 한편 닭고기업계와 육계사육농가들의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C사의 행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사육 확대를 삼가도록 주의를 주기 위해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C사가 후원하는 프로야구 구단 NC다이노스의 경기가 열린 경남 마산야구장과 서울 잠실구장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5. 치킨가격 인하

본회는 지난 7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치킨 가격으로 인해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치킨외식산업 업체들에게 치킨가격 인하를 요구하였다. 치킨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닭고기 생산자들은 AI 발생은 물론 FTA에 따른 닭고기 수입과 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해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최근 10년간 치킨가격은 물가상승률(31%)보다 높은가격(45%)으로 뛰어오르면서 1마리당 2만원 수준까지 오르는 등 닭고기 소비위축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치킨의 제공량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소비자의 60%가 가격에 비해 양이 적다는 불만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치킨업계에서는 높아진 가격에 대해 인건비나 임대료를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사실은 치킨업계에서 빛어지는 스타마케팅 등 치열한 경영이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영세한 가맹점에 전가되어 비용 상승을 부추김으로써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항변하였다. 치킨외식업계에서 가격을 현실적으로 낮춰준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을 만족시켜 닭고기 소비를 더욱 신장할 수 있도록 프렌차이즈본사에 상생 발전을 요구하였다. **양계**